



여론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중간평가: 다면적 위협 인식에 대응하는 복합 전략 펼쳐야

손 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오승희, EAI 수석연구원
이영현, EAI 연구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을 맞이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심층 이해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다면적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인 남북한 갈등보다 주변국 간 무역/기술 마찰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주변국 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에 대한 위협인식과 함께 20-30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방사능 등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보였다. 남북한 긴장완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여전히 최대 위협요인이고 뒤이어 아베의 일본과 트럼프의 미국이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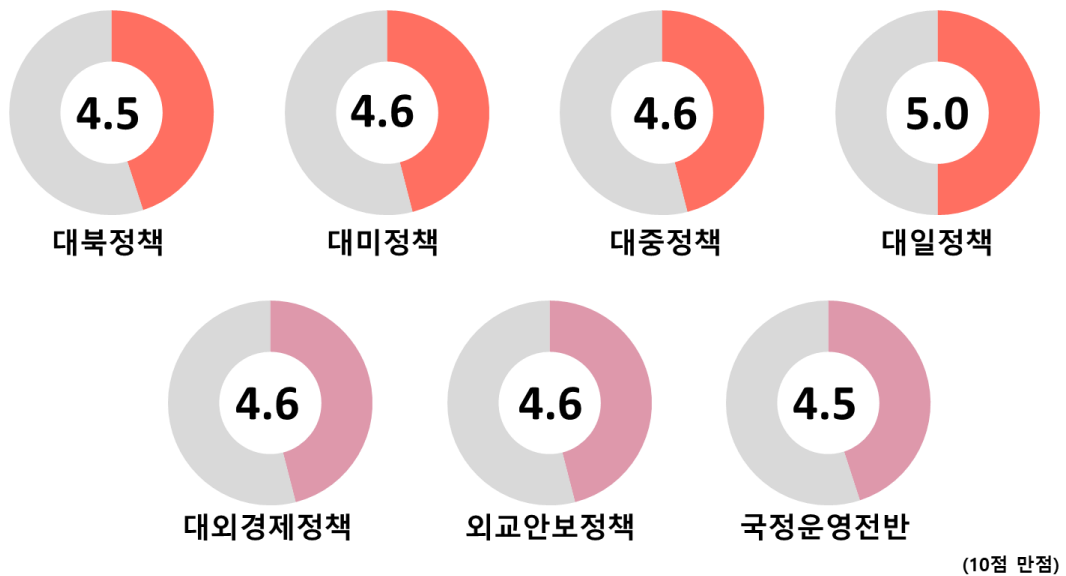
그렇다면 외교안보 대처 역시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로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혹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 보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 발전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력이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 그리고 분열된 국론 통합 요구도 높은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과제는 국민들의 다면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복합 대응에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상 과제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재조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한일관계 위기 해법 마련, 개방적이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통상질서 재건축을 위해 외교력을 투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국정전반 4.5점, 외교안보정책 4.6점 (10점 만점)

지난 10월 진행한 EAI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및 태도 평가는 국정운영 전반 4.5점, 외교안보정책 4.6점으로 양자 간 큰 차이 없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11월 첫째 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 45%, 리얼미터 44.2%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외교정책을 보았을 때, 대북정책(4.5점), 대미정책(4.6점), 대중정책(4.6점)으로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비슷한 가운데 대일정책(5점)에 대한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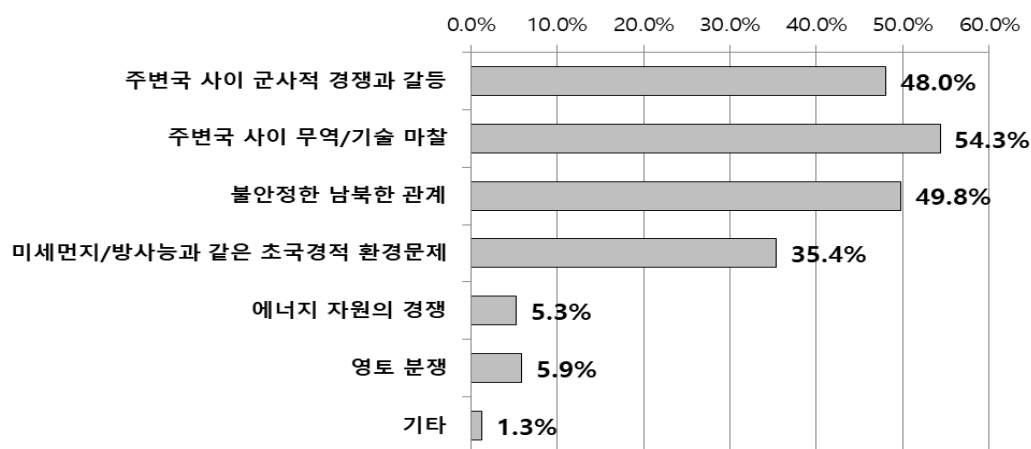
〈그림 1〉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10점 만점)



한국인의 위협인식: 군사안보적 위협보다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 위협

최근 미중 무역마찰과 한일 경제 갈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민들은 경제 이슈에 대해 높은 위기감을 보였다. 〈그림2〉에서 보듯이, 한국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 (49.8%)와 주변국 사이 군사적 경쟁과 갈등 (48.0%)보다 주변국 사이 무역/기술 마찰(54.3%)을 꼽았다. 또한, 미세먼지/방사능 등의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대한 위협인식(35.4%)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52.5%)이 미세먼지 이슈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답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인의 위협인식이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갈등에서부터 왔던 과거와 다르게, 다면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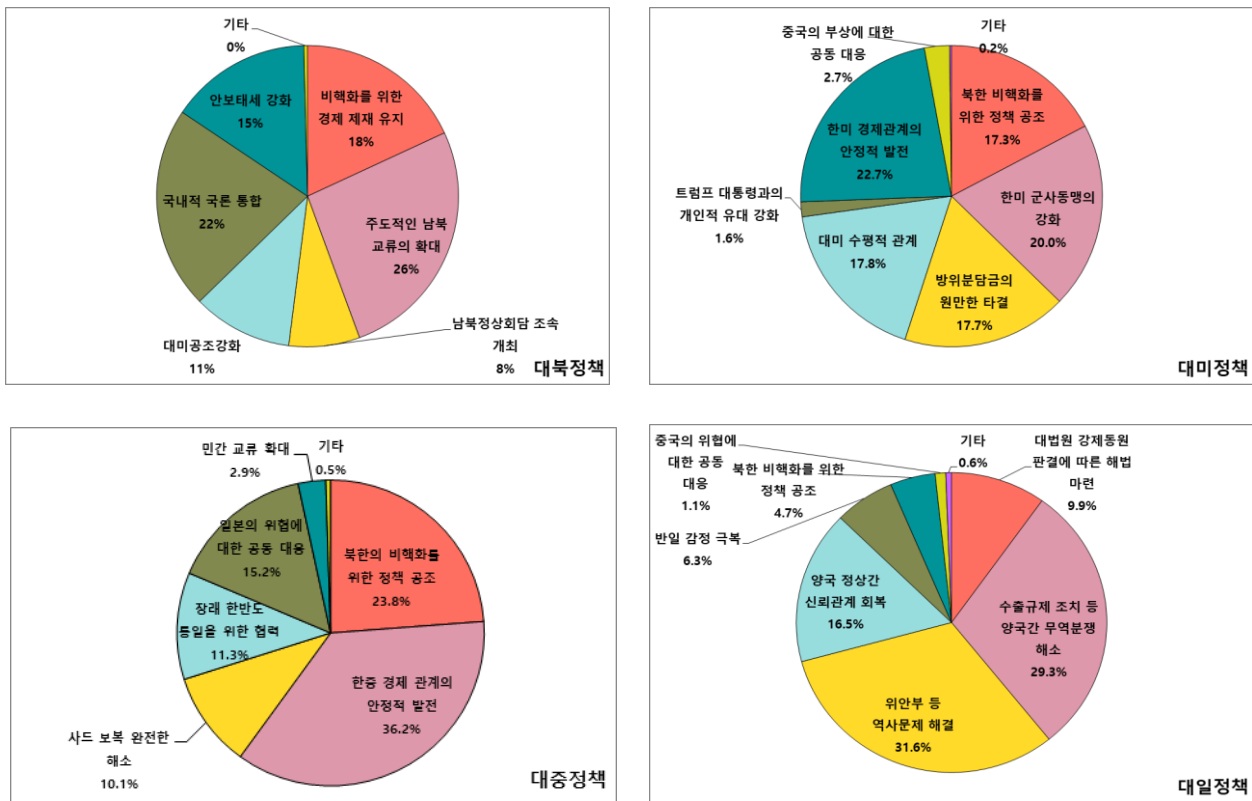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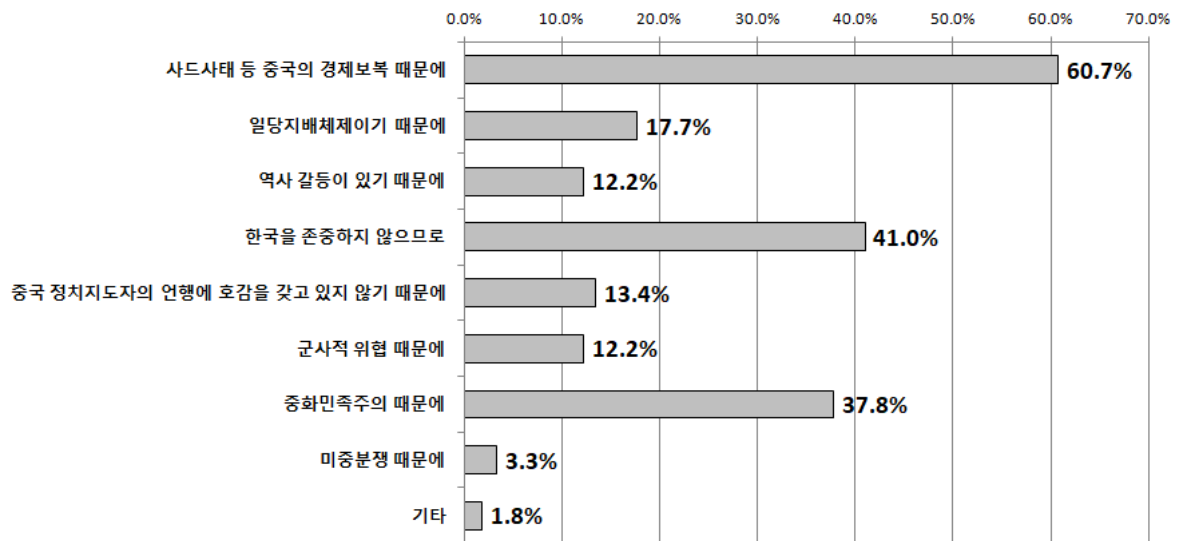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위협 이상으로 경제적 위협이 부각된 것은 각각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슈는 각각 ‘한미경제관계의 안정적 발전’ (22.7%)과 ‘한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발전’ (36.2%)으로 모두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었고, 대일외교에 있어서도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31.6%) 다음으로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로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간 무역분쟁 해소’ (29.3%)를 답했다 (그림3).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인상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은 크게 작용하였다. 응답자의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60.7%가 ‘사드 사태 등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 대외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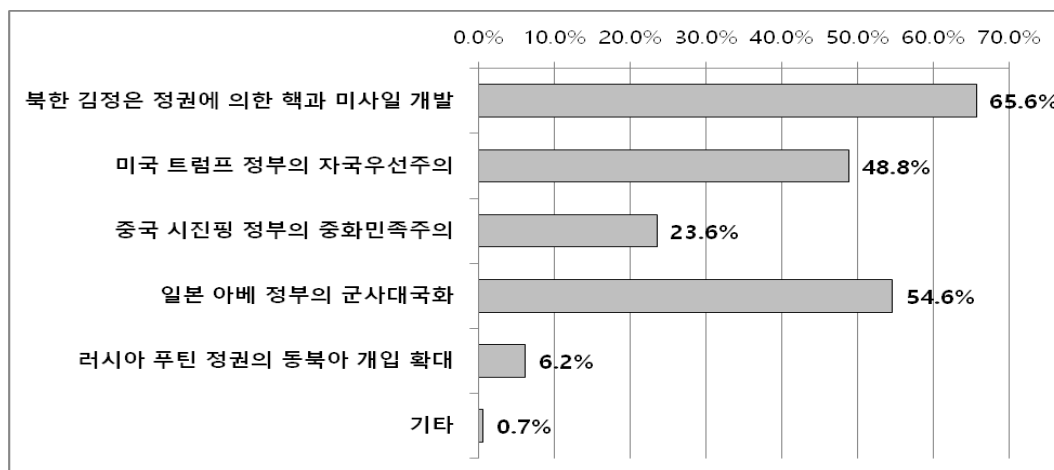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1+2순위)



주변국 중 북한에 이어 일본과 미국에 대해 높은 우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 (42.1%)라는 의견이 ‘안정적이다’ (31.2%)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북한 긴장완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최대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장 큰 위협으로 선택되었고, ‘일본 아베 정부의 군사대국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보다 미국과 일본의 자국 중심적 정책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주변국의 위협(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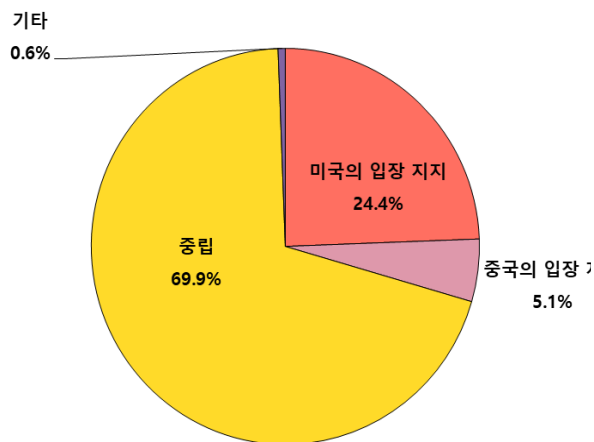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과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도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80.4%)는 의견이 ‘만족한다’ (11.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은 특히 7월 한일 갈등 이

후 ‘나빠졌다’ (90.1%), ‘변화 없음’ (7.7%), ‘좋아졌다’ (1.4%)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 (77%), 변화 없음’ (19.7%), ‘좋아졌다’ (2.4%)라는 응답과 비교하면,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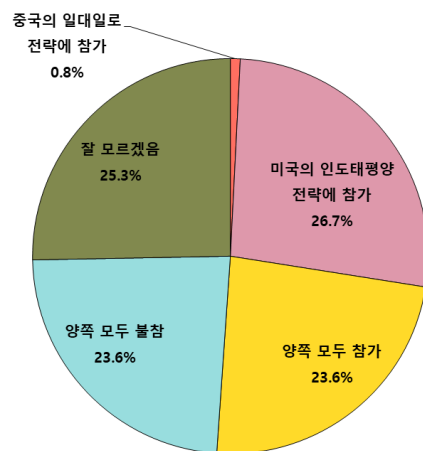
미중 관계 속 한국의 포지셔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거부,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

다면적 위협인식에 따른 외교안보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미중이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69.9%)라고 판단하지만, 굳이 선택을 할 경우 중국(5.1%)보다는 미국(24.4%)을 선택하고 있다 (그림 9).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양쪽 모두 참여(23.6%)하거나 양쪽 모두 불참(23.6%)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중국(0.8%)보다는 미국(26.7%)을 선택하는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았다(그림 10). 요약하면 첫째, 한국민은 미중 경쟁에 있어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둘째, 선택의 순간에서는 미국을 꼽고 있다.

<그림 9> 미중 갈등 시 한국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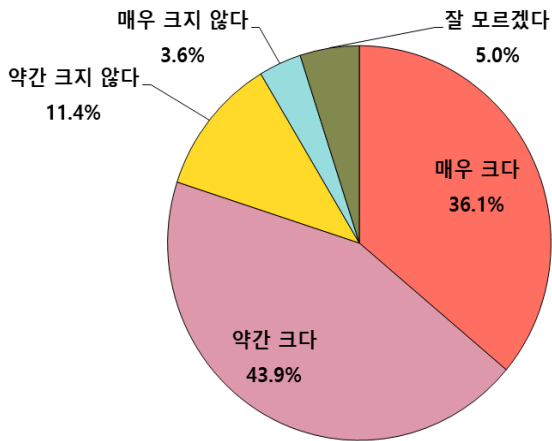


<그림 10>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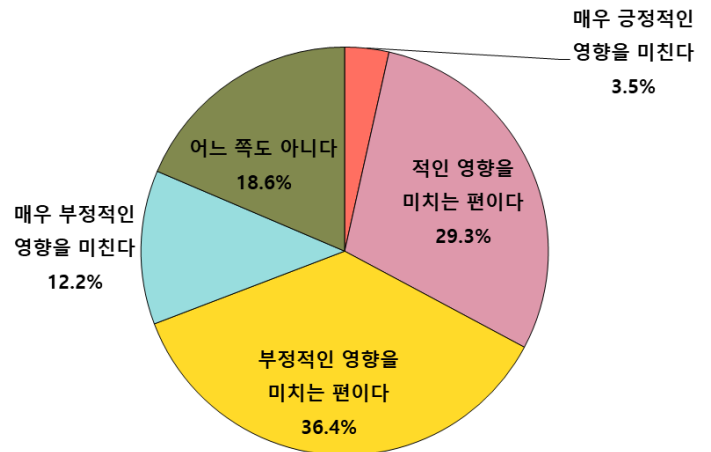


여기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흥미롭다.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80.0%) (그림11).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중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그림12). 나아가 한국인 세 명 중 두 명은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위협이다’ (66.9%)라고 답하였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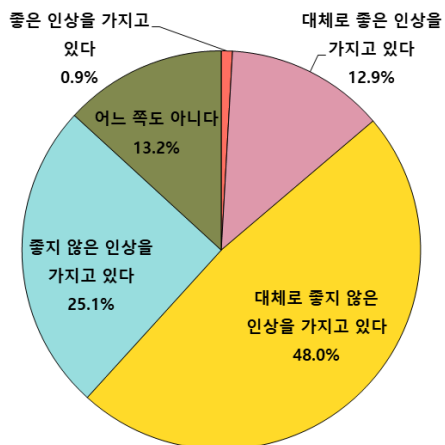


〈그림 12〉 북중관계 개선이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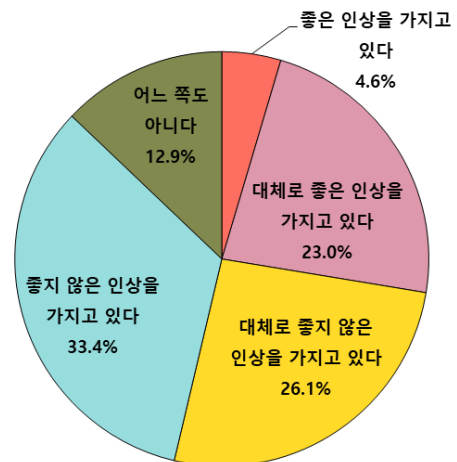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도 일치한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13.8%에 불과하고 부정적 인상은 73.1%에 이르고 있다 (그림 13). 일본의 경우 긍정적 인상이 27.6%, 부정적 인상이 59.5%인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림 14). 최근 일본과 역사갈등, 수출규제, 지소미아 논란 등으로 최악의 갈등을 연출하는 상황을 상기해 보면 대단히 시사적이다.

〈그림 13〉 중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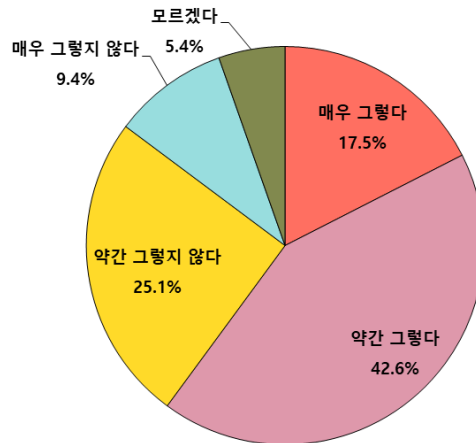


〈그림 14〉 일본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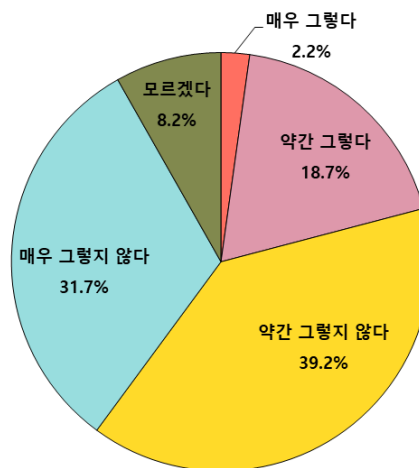


요컨대, 한국인은 중국을 영향력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위협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림 15), 중국에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줄고 있는가란 질문에도 다수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림 16). 한국인은 미중 갈등 상황을 원치 않으나 최종 선택은 미국이다.

〈그림 15〉 ‘한미동맹은 중국의 공격과 압력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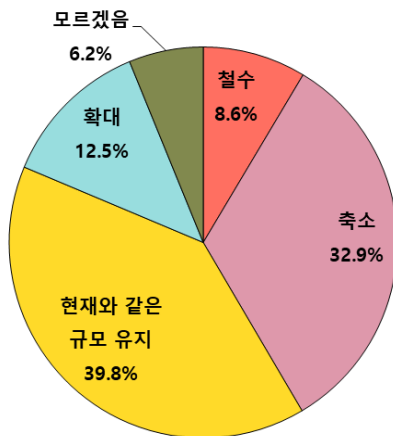
〈그림 16〉 ‘미국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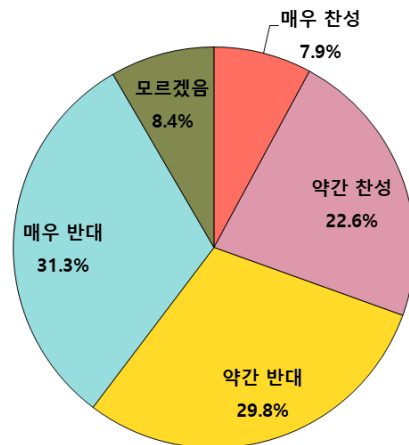
여전히 중요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을 여전히 중요한 동맹관계로 인식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는 경우에도 주한미군 확대(12.5%), 유지(39.8%), 축소(32.9%), 철수(8.6%)로 주한미군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찬성 응답이 30.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0.6%p 높은 61.1%였다.

〈그림 17〉 주한미군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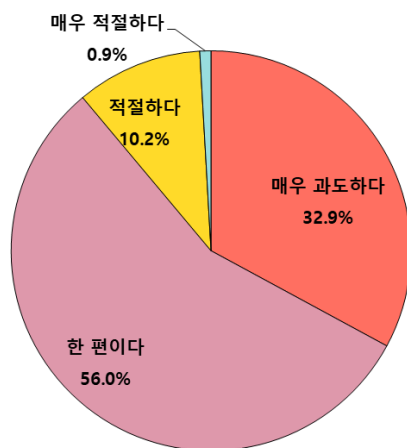


〈그림 18〉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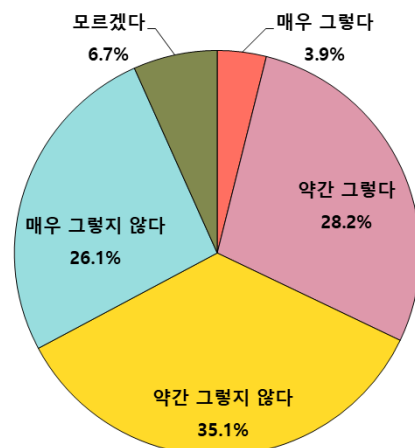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분담 요구에 대해 88.9%가 과도하다고 대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역시 32.1%로 나타났다. 과도한 방위비를 감수해서라도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적지않은 것이다.

〈그림 19〉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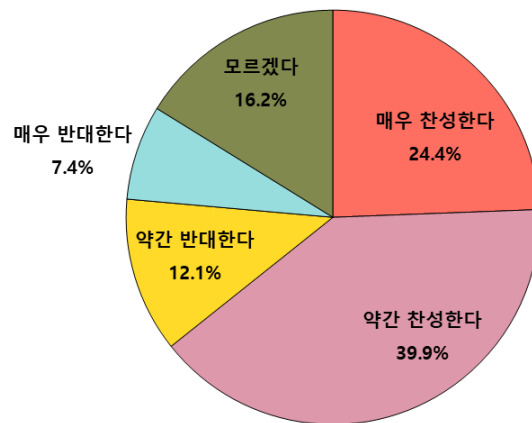


〈그림 20〉 방위비 증액 감수



북미 수교에 대해서는 찬성(64.3%), 반대(19.5%)로 북미수교에 대해 세 명 중 두 명은 북미수교를 지지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와 한미동맹의 강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가 중요하지만, 북한문제 이외에서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답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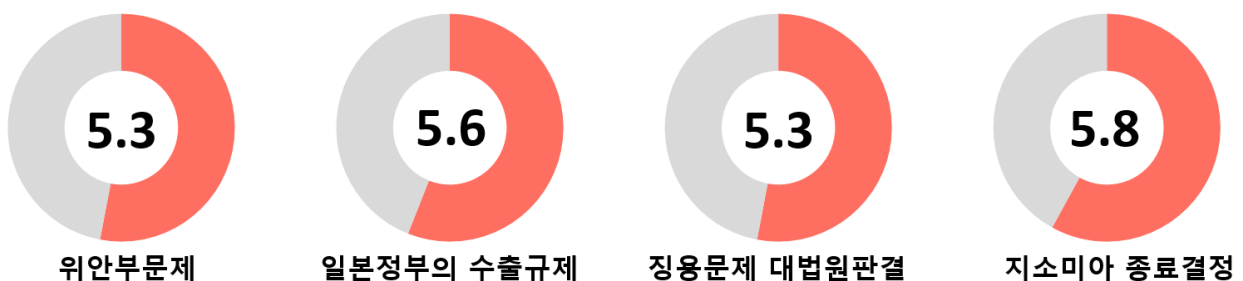
〈그림 21〉 북미수교 지지



상대적으로 높은 대일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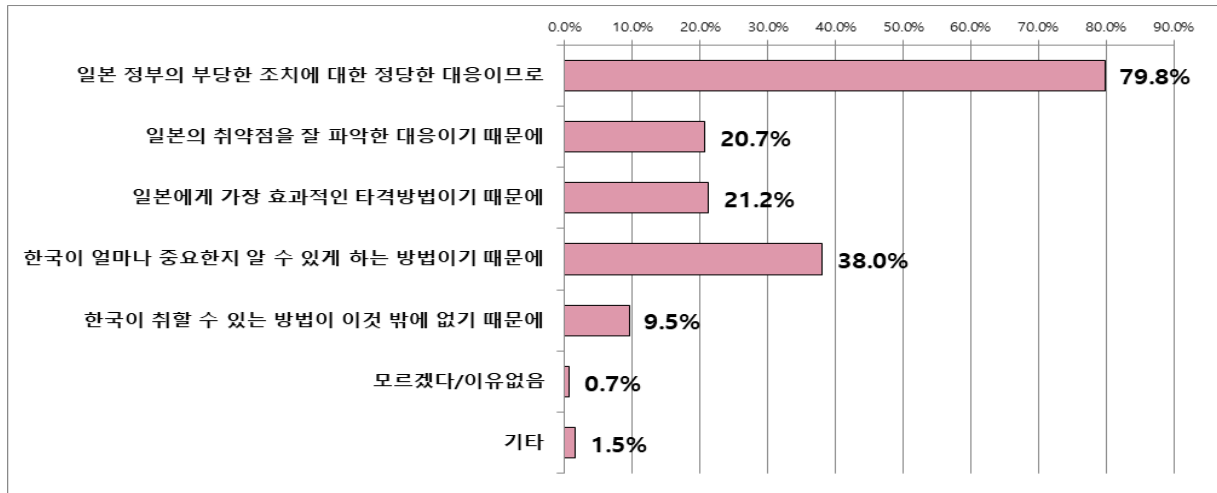
대부분의 외교정책 평가가 4.5-4.6점을 받은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은 5.0점을 받으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일정책의 세부 이슈에 대한 대응과 태도 평가의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5.3점, 징용문제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은 5.3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5.6점,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5.8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다 (그림 22).

〈그림 22〉 일본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태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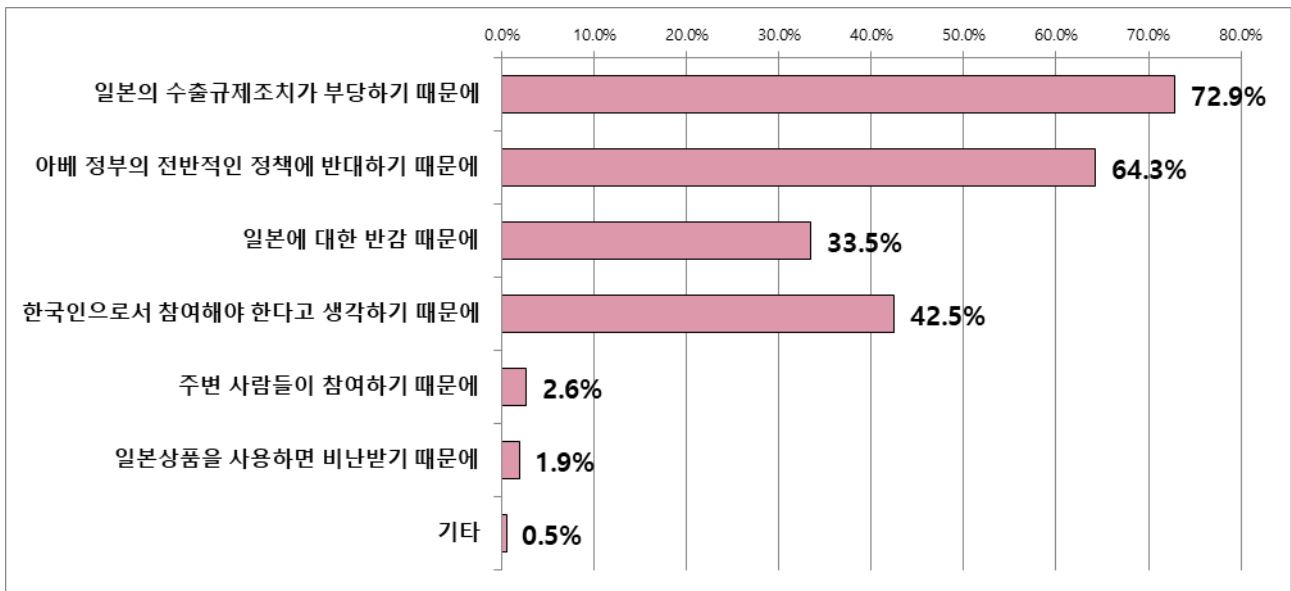


대일 정책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정부가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0.3%는 ‘지지한다’, 18.9%는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답하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국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79.8%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므로’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23).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유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72.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반대조치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24). 일본과 한국 모두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경 대응 조치를 선회하기 위해서는 국내여론 및 국내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3〉 지소미아 종료 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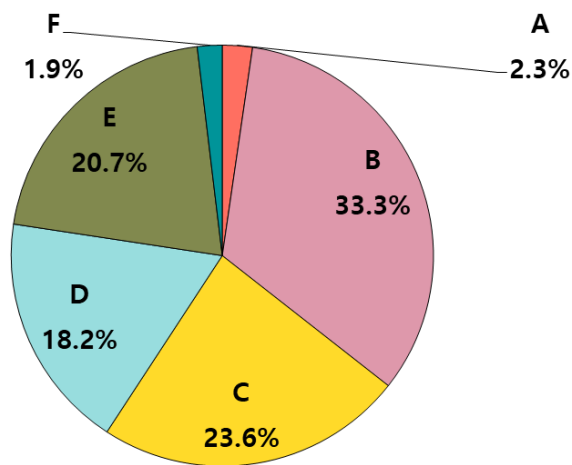
〈그림 24〉 불매운동 지지 이유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전망

응답자 대다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간 비핵화 실현 전망은 극소수(2.3%)인 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응답은 33.3%,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8.9%였다.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23.6%)는 의견도 상당하였다 (그림 25).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으며,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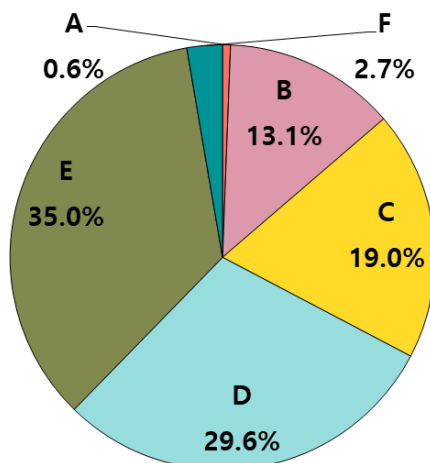
〈그림 25〉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 | |
|---|----------------------------|
| A |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
| B | 비핵화가 실현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
| C |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 D |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
| E | 비핵화는 애초부터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
| F | 모르겠다 |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3.7%인 반면, 64.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네 배 이상(50.9%p) 높았다 (그림 26).

〈그림 26〉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신뢰도



| | |
|---|---------------|
| A | 매우 신뢰한다. |
| B | 대체로 신뢰한다. |
| C | 어느 쪽도 아니다. |
| D |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
| E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F | 모르겠다 |

문정부의 주요 지지층: 40대, 그리고 광주/전라 지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EAI가 조사한 7개 분야 정책평가에서 특히 50-59세의 평가가 전체 평균 점수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60-69세와 70세 이상은 평균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고, 30-39세와 40-49세는 문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대는 50대와 같이 중간 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세대별 정책 평가(10점 만점)

| | 국정운영 | 외교안보 | 대외경제 | 대북정책 | 대미정책 | 대중정책 | 대일정책 |
|--------|------|------|------|------|------|------|------|
| 전 체 | 4.5 | 4.6 | 4.6 | 4.5 | 4.6 | 4.6 | 5.0 |
| 19-29세 | 4.4 | 4.5 | 4.6 | 4.3 | 4.7 | 4.4 | 4.9 |
| 30-39세 | 4.9 | 5.2 | 5.2 | 4.9 | 5.1 | 4.9 | 5.7 |
| 40-49세 | 5.4 | 5.5 | 5.5 | 5.5 | 5.5 | 5.4 | 5.9 |
| 50-59세 | 4.5 | 4.5 | 4.6 | 4.4 | 4.5 | 4.5 | 5.1 |
| 60-69세 | 3.6 | 3.7 | 3.7 | 3.7 | 3.7 | 3.9 | 3.9 |
| 70세이상 | 3.1 | 3.3 | 3.4 | 3.2 | 3.4 | 3.8 | 3.1 |

지역별 평가의 경우, 광주/전라 지역이 문정부 정책을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지역의 정책 평가가 모두 5점대 후반~6점대 초반을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영남/부산은 문정부의 정책에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을 주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2〉 지역별 정책 평가(10점 만점)

| | 국정운영 | 외교안보 | 대외경제 | 대북정책 | 대미정책 | 대중정책 | 대일정책 |
|----------|------|------|------|------|------|------|------|
| 전 체 | 4.5 | 4.6 | 4.6 | 4.5 | 4.6 | 4.6 | 5.0 |
| 서울 | 4.4 | 4.5 | 4.6 | 4.6 | 4.6 | 4.5 | 5.1 |
| 인천/경기 | 4.7 | 4.9 | 4.9 | 4.6 | 4.8 | 4.8 | 5.2 |
| 대전/충청 | 4.4 | 4.4 | 4.4 | 4.2 | 4.3 | 4.3 | 4.5 |
| 광주/전라 | 5.9 | 5.8 | 5.9 | 5.8 | 6.0 | 5.7 | 6.4 |
| 대구/경북 | 3.8 | 4.0 | 4.1 | 3.9 | 4.0 | 4.0 | 4.3 |
| 부산/울산/경남 | 3.8 | 4.0 | 4.0 | 3.9 | 4.1 | 4.1 | 4.3 |
| 강원/제주 | 4.2 | 4.4 | 4.4 | 4.0 | 4.3 | 4.7 | 4.6 |

이념성향별 정책평가는 진보에서 6점대의 높은 평가가 중도에서 4점대, 보수에서 3점대의 점수로 집계되었다. 특히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대일정책에 평균 6.8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도성향의 응답자도 다른 정책보다는 대일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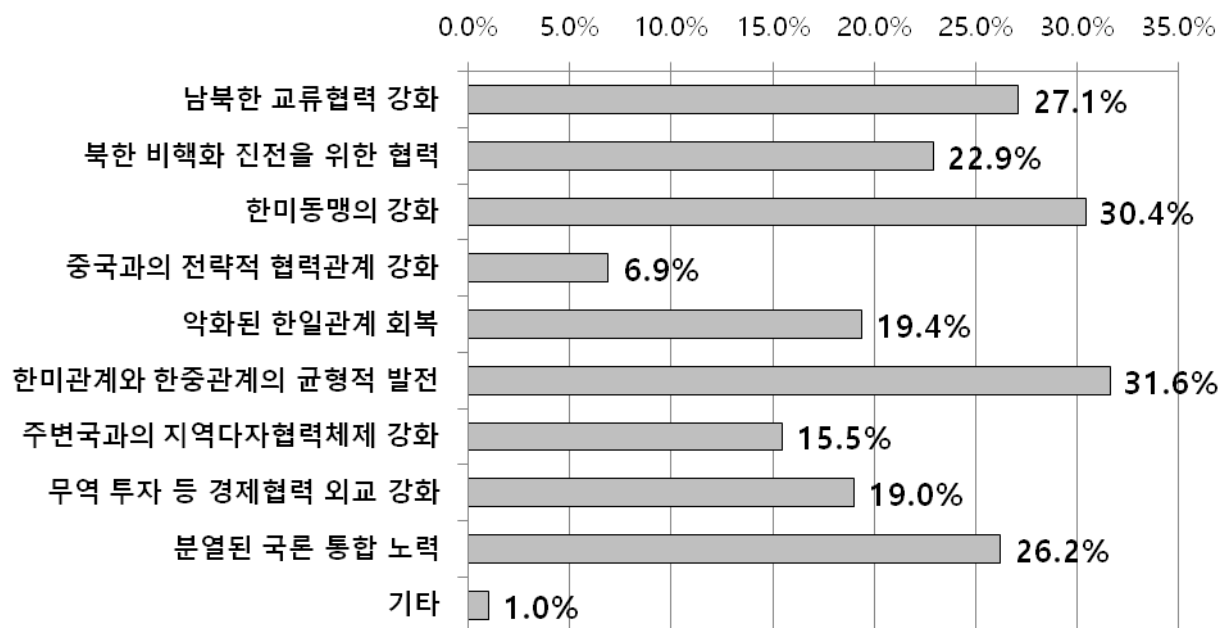
〈표 3〉 이념성향별 정책 평가(10점 만점)

| | 국정운영 | 외교안보 | 대외경제 | 대북정책 | 대미정책 | 대중정책 | 대일정책 |
|-----|------|------|------|------|------|------|------|
| 전 체 | 4.5 | 4.6 | 4.6 | 4.5 | 4.6 | 4.6 | 5.0 |
| 진보 | 6.2 | 6.3 | 6.2 | 6.2 | 6.1 | 5.9 | 6.8 |
| 중도 | 4.3 | 4.4 | 4.5 | 4.3 | 4.5 | 4.5 | 4.9 |
| 보수 | 2.8 | 3.0 | 3.0 | 2.8 | 3.1 | 3.2 | 3.1 |

향후 과제: 국론통합의 중요성

한국이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제로는 한미관계와 한중 관계의 균형적 발전, 한미동맹의 강화, 남북한 교류협력의 강화와 함께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을 꼽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외교사안별 상이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안으로 싸워서는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정치가 전제되어야 한국 대외정책의 안정적 기조를 형성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

<그림 27>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1+2위)



■ 공동저자/대표집필: **손 열** EAI 원장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언더우드학부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8, with T.J. Pempel),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김상배, 이승주 공편),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등이 있다.

■ 공동 저자: **오승희** EAI 수석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일관계, 일본 외교정책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2018, 공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2017, 공저),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2017, 한국정치학회보) 등이 있다.

■ 공동 저자: **이영현** EAI 연구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EAI의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협력, 지역통합, 유럽정치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Divergent Paths of Integration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2019, EU연구)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y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11월 25일

“여론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중간평가: 다면적 위협 인식에 대응하는 복합 전략 펼쳐야”

979-11-90315-22-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